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2. 11. 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11월 1일(화) 14:30~18:24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177호, 제184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2년도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84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 의결안건 제185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찰실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6호 『○○○○○○○○○○○○유한회사의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본 건 대여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주시기 바람. ☆☆☆은 팀장이라는 호칭은 있었으나, 통상적인 팀장과 달리 업무 전결권 등이 전혀 없었음. 따라서 ☆☆☆이 ◎◎◎의 일방적인 지시를 거부할 방법은 없었음. 금감원에서 ☆☆☆을 본 건 대여의 행위자로 판단하신 주된 근거는 ☆☆☆이 ◎◎◎의 통보 Email을 자산관리자 등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산관리자와의 Email 송·수신은 원래 NPL본부 내 막내 매니저의 일임. 매니저의 연이은 퇴사로 NPL본부에 ◎◎◎ 본부장과 ☆☆☆ 2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의 Email을 전달하게 되었을 뿐임. 이와 같은 상황을 살펴주시고, ☆☆☆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와 ☆☆☆이 수평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관계인지?
- (보고자) 둘이 합의해서 해당 자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 하급자인 ☆☆☆에게 지시해서 ☆☆☆이 E-mail을 보내고 자금관리자의 요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음.
- (위원) NPL Pool 안에 들어 있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고 그것의 자산가치를 살려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법인지?
- (보고자) 유동화계획에 따르면 유동화계획을 등록할 때 실제로 유동화자산을 확정하게 되어 있음. 이 건의 경우에는 ●●●●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것이었는데, 실제 신규로 매입한 것은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었음. 이런 경우에는 유동화계획상의 변경등록이 필요함.
- (위원) ☆☆☆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만들어 올려서 그렇게 해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의 주도적인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지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치하는 것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임.
- (위원) ☆☆☆가 채권매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안에 동의함.

- (위원) ☆☆☆과 ○○○○의 역할이 다른 것 같음. 그래서 저는 ○위원님과 같은 의견임.
- (위원) ☆☆☆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다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수사기관 참고사항으로 제공하자는 것이 제 의견임.
- (위원장)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대로 제186호 안건은 ☆☆☆에 대해서 수사기관 참고사항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그 외 다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87호 『(주)우리금융지주 등 4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조치대상법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 대리인 자격에 관한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어 안전심의를 보류하였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88호 『(주)대덕 등 10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2021년 3월 16일에 (주)바이오다인 매매에 있어서 공매도가 발생하였음. 당시 펀드의 잔고와 매매시스템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매도가 나갔던 사례임. 당시 저희는 사건 발생 인지 직후 결제불이행을 막고자 바로 재매수를 진행했고 이후에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모수탁변경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잔고와 매매시스템을 일원화하였음. 저희가 악의를 가지고 진행한 매도가 절대 아니고, 사후조치를 통해서 재발발생도 막으려고 노력했음. 이를 통해서 실익을 추구하지도 않은 점을 말씀드리고 이를 감안해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음. 원래 공모주를 배정받았던 펀드가 아니라 다른 펀드에서 매도하는 실수가 있었음. 공매도할 의도가 없었고 실수라고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을 함.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기본적으로 자조심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은 의견임.
- (위원장) 제188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음. ○○
○○○○ ○○○○ ○○○○○○ (○○) Limited [외국 금융투
자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7,500만 원이 아닌 6,000만 원
으로, ●●●●●●●●●●●●●● ●●●●●● ●●●●●●●●●●
●●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6,000만
원이 아닌 4,5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고, 그 외 다른 조치사
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189호 『NHN한국사이버결제(주)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
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이번 사고는 저희 담당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온
종일 셀트리온을 포함한 다수의 매도거래를 체결하는 과
정에서 pre-trade alert가 떴음에도 그것을 관리하는 준법
감시팀에서 한 담당자가 장중에 거래된 내역을 제대로 확
인하지 못하고 경고메시지를 승인하는 착오가 있었음. 그
로 인해 저희가 보유주식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트

레이더(trader)가 주문을 제출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둘의 계좌에서 총 229주의 공매도가 발생하게 되었음.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 발생 이후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해당 담당자가 포함된 준법감시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착오로 인하기는 하였지만 이런 공매도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 저희는 지속적으로 자본 시장에 규정된 여러 규제와 절차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위원) 외국계 펀드들의 경우에 주식배당으로 인해서 신주가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능주문으로 오인하고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한국의 경우와 외국의 경우에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프로세스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 (진술인) 제가 외국의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한국의 배당 입고 시기나 일정 절차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배당 자체라기보다는 준법감시팀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 발생한 건으로서 배당 사고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음. 여러 해외 회사들도 이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알고 있으며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런 배당과 관련된 문

제가 나타나지 않는지?

- (보고자) 우리나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좌 관리가 증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외국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보관하는 곳과 실제 운용하는 주체가 달라 이중적인 확인이 필요하여 운용이 좀 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위원)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금감원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면 좋지 않을까 싶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위원) 아까 금감원에서 설명하셨지만 한국과 외국의 증권사가 상황은 서로 다름. 보관·운용이 다르고,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 실제 옴니버스 계좌로 주문이 되어서 정확하게 산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주식잔고관리시스템이 국내 증권사든 외국계 증권사든 잘 구축되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90호 『(주)○○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위반비율이 둘 다 5.89%로 똑같은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이 소속된 (주)△△△△△△△△는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를 했고 ■■■이 소속된 (주)▲▲▲▲▲▲▲▲은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를 했음. 그런데 (주)△△△△△△△△의 특수관계인 중 일부를 전략적 투자자(SI)측인 (주)▲▲▲▲▲▲▲▲의 지분인 것으로 허위보고를 했음. 그래서 양쪽 위반비율이 동일함.

○ (위원) □□□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혀 있는 것 외에도 불공정거래 관련한 판결문에 많이 등장하시는 분임. 조사실시 배경을 보면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하여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만 올라왔음. 그러면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지?

- (보고자) 외국기업을 인수하면서 바이오사업으로 진출한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혐의로 통보가 되었는데, 그 건이 2018년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2019년 3월에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하면서 문제 삼았던 부분이었음. 그래서 회사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 후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 실체가 있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음.

○ (위원) 과대·과소보고를 한 목적이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 (보고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한 □□□의 경우에는 주

식을 처분하는 것을 미공개하기 위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 같음. ■■■■ 측에서는 자기가 전략적 투자자(SI)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라 할 만큼의 지분이 아니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해서 최대주주가 안정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공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두 명은 다 도피 중이어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16시 29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 의결안건 제191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행위자를 ★★★로 본 이유는 무엇인지?

- (보고자) 실제로 ★★★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의 전반적인 주문매체라든지 주문시간, ★★★나 ☆☆☆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는 ★★★가 직접 주문을 내고 이용한 것이라고 봤음.

○ (위원) 그간에는 금액이 적어도 정보생성자가 직접 관여된

경우에는 고발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건은 수사기관 통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보고자) 정보생성에 관여한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사회적 물의 야기로 고발을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가 직접 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92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별조사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본인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인정을 하지만 혐의계좌의 계산주체는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보를 본인이 제공해 주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인지?

- (보고자) 본인이 직접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매매까지 실제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 (위원) 실제로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계산주체만 본인이 아니라는 것인지?

- (보고자) 누나 계좌라든지, 배우자 계좌는 계산주체가 다르고 자기가 일임을 받아서 운용만 해준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50호 『(주)○○ 등 27개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긴급조치 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51호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긴급조치 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52호 『(주)○○○○ 등 5개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긴급조치 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193호 『(주)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194호 『트러스트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195호 『제이앤제이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
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196호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는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최대주주이자 최고

운용책임자 업무를 담당했던 000임. 자녀들에게 물려줄 회사에 개인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오해를 받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음. 이점 충분히 헤아려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음.

- ▶ (진술인) 법률대리인임. 본 사안은 000이 자기가 최대주주로 있는 AAAAA(주)에게 자금을 141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중에 141억 원을 증권 상품에 투자해서 투자의 손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자기계산으로 투자한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자기계산이라 함은 구성요건이 2가지임. 자금이 본인의 출연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손익이 본인에 귀속되는 것이어야 함. 그런데 ‘자기계산으로’라고 하는 말에 자기가 지배하는 법인의 소유가 포함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167조제1항 단서에 보면 그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명백히 있음. 상법, 자본시장법에 ‘자기의 계산으로’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말에 특수관계인의 취득을 포함시키면 엄청난 법적 혼란이 발생함. 예를 들어 투자매매업에 자기가 100% 지배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모든 금융지주회사들이 다 투자매매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됨. 금감원이 본 건에 대해서 자기계산으로 본 것은 000이 AAAAA(주)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자기매매를 위한 자기자금 출연으로 판단한 것 같고, 이 증권투자로 인해서 생긴 이익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손익의 귀속관계로 판단한 것 같음. 본 건 000은 AAAAA(주)에 대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에

불과함. 이 자금은 AAAAA(주)의 일반운전자금 계좌로 들어갔음. AAAAA(주)의 차입금은 고유자금과 합쳐서 증권선물계좌에 투자 및 증거금 예치되었음. 이 과정에서 OOO와 AAAAA(주) 사이에서는 소비대차약정서가 체결되었고 이사회 승인 결의가 있었으며 재무제표에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기표가 되었고 원천징수 등도 완벽하게 이루어졌음. 이 과정에서 AAAAA(주)는 이 자금을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점 이외에는 은행에서 차입하였거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조달을 했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음. AAAAA(주)는 차입금과 고유자금을 합쳐서 투자를 했고 투자의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으며, 그 이익과 손실은 AAAAA(주)가 감수하였음. OOO은 투자이익과 손실과는 무관하게 대출약정에 따른 확정이자를 지급받고 끝났음. 실제로 투자의 성과를 살펴보면, 고유자금의 투자이익과 손실 그리고 차입금의 투자이익과 손실, 양자의 구별이 불가능함. 두 개를 합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음. 검사 대상 기간이었던 2017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그 기간을 보면 4년간 순손실이 약 32억 원 연속 기록되어 있음. 대주주는 그 손실을 전혀 보전하지 않고 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 받아갔음. 이 회사의 상품투자 상황을 보면 펀드 상품을 제외하면 비중이 14.8%, 16.4%, 6.7%에 불과함. 그때는 사실 지분에 관한 소송이 있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 이런 상황을 자기때매에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아야 될 것임. 본 건 투자 외에도 목적사업 및 투자가 있음. 임대사업도 있고 △△△ 이사가 주도한 투자가 있고, 회사 분할을 했는데 분할한 회사에 새로운 사업성과들이 모두 합산되어서

OOO 개인이 투자에 관여한 대여금 투자를 분리해서 이익배당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이것은 모든 다른 사업의 성과와 합쳐서 배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임. 금감원은 이 대금과 연관된 매매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이 회사가 주식과 선물에 투자한 모든 고유자금 투자금까지 포함해서 위반금액으로 산정했음. 그러다보니까 보고를 누락한 월수도 50회로 계산됐음. 그러나 실제로 OOO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잔액이 남아있던 기간은 46개월밖에 안 됨. 그렇기 때문에 보고누락이라고 하더라도 46개월로 보아야 될 것임. 그래서 금액도 특정되지 않았고 보고 횟수도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음.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4년간 내리 손실을 본 기업, 그리고 다른 사업까지 차용하고 있는 이 기업에서 어떻게 OOO의 대여금이 OOO의 출연이고, OOO의 계산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음. 이것은 금감원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오해한 나머지 본 사안을 그 사안의 사례에 억지로 유사한 점을 찾아내서 부합하는 것처럼 잘못 판단한 사례라고 생각됨. 그러므로 본 사례는 OOO의 자기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진술인)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 경영전략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에 해당, 타인명의로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어머니는 15년 전부터 주식투자를 해왔으며, 저는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전을 대여하였음. 어머니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이며 매매의 사결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계좌에 대한 통제권도

없으며, 주식운용에 따른 투자손익은 어머니에게 귀속되어 차명거래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자기계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함. 자기의 계산이라 하면 주식취득자금을 자신이 조달하고 주식운용에 따른 손익이 직접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함. 그리고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인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자기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 따라서 저는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나 어머니 증권계좌는 어머니 본인이 직접 관리 및 주식매매를 하였으므로 자금대여 사실만으로 어머니 증권계좌의 주식거래 계산의 주체를 저로 단정하여 자본시장법 제63조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검사국은 ◇◇◇이 어머니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어머니가 증권사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하며 매매를 했고, 직접 출금처리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증거만을 내세워 법규위반의 잣대로 삼았음. 또한, 검사국은 어머니의 상환금액을 증권계좌를 통한 입금금액만을 반영한 3,700만 원을 반영하여 최대투자원금 1억 300만 원이라고 하였음. 그러나 해당 기간에 어머니가 어머니 은행계좌에서 입금하여 상환한 2,000만 원이 누락되어 반영되지 않았음. 따라서 상환금액은 총 5,700만 원임. 검사국이 주장한 최대투자원금은 어머니의 상환금을 모두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최대투자원금을 검사국이 주장하는 1억 300만 원에서 8,300만 원으로 수정이 필요함.

○ (위원) 운용한 자산 중에 펀드비중이 높다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펀드상품 투자비중이 48.4%에서 75.8%임.

○ (위원) 지분 관련 소송이 있어서 적극적 운용이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소송이었는지?

▶ (진술인) 2014년도에 리조트를 매각해서 약 80억 원에 가까운 고유자금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전 동업자가 자기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소송을 걸어서 그 소송이 2020년 8월에 끝났음. 그래서 회사의 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서 공격적인 사업을 펼치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음.

○ (위원) 차입금과 고유자금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 (진술인) 그것은 자기자본으로 따지면 약 9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이고, 차입금은 평균잔액으로 따지면 12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었음.

○ (위원) AAAAA(주)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 (진술인) OOO의 가족 2인과 외부인이 1인 있음.

○ (위원) OOO 진술인께서 구체적으로 선물이나 주식매매를 지시한 적이 있으신지?

- ▶ (진술인) 초기에 저의 딸이 회사에 입사해서 본인이 회사를 살려 보겠다고 공유오피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차원으로 개입한 적이 있음.
- (위원) 현재든 과거든 회사에 신고한 계좌로 자기매매를 한 경우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진술인) ○○○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펀드에 가입하고 있으며, 직접 주식을 위한 매매는 하지 않음.
- ▶ (진술인) ◇◇◇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식을 한 적이 없음, 다만, 펀드로만 재테크를 했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매도가능증권 비중이 펀드상품을 제외하면 그 비중이 17년, 18년, 19년에 14.8%, 16.4%, 6.7%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술인의 이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법인에 지분관련한 소송이 있어서 지분구조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자체 고유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셨으면 함. 아울러, 전체 자금 중에 고유자금과 차입자금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시기별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 (보고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본인의 주장대로 회사를 자기 자식들한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자기는 조언 정도만 해주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 (보고자) 실질적으로는 언제든지 이 자금이 이익 형태로 배당이 될 수 있고 AAAAA(주)의 86%가 OOO 회장의 지분이기 때문에 OOO의 자기매매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것임.
- (위원) 소유주가 누구이고 배당이 누구에게 갔는지도 따진다면 투자매매업자의 자기계산이 아니라 지주사의 자기계산이라는 뜻이냐는 식으로 대리인이 반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 (보고자) 자기계산이라고 함은 아까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금을 본인이 인출하고 그 손익이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 자기계산의 원칙적인 해석임.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63조 규제의 목적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회사에 신고를 한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 증권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사가 내부통제 차원에서 불공정매매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정의 취지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자기계산을 한 본인에게 손익이 직접 귀속되어야 하지만 이 취지에 따르면 OOO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단순히 그 자금대여행위를 넘어서 매매까지 사실상 본인이 주도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제63조 취지에 따라서 그것을 자기계산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봐야 할 것 같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증선위원장 입장(증선위원장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177호 『대한토지신탁(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위원장) 의결안건 제177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한토지신탁(주)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따라 총 78억 8,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였음. 그러나 2016년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책임준공확약은 지급보증과 같은 직접적인 신용공여가 아닌 간접적·2차적인 신용보강이라는 점, 업계의 위반여부 인식에 일부 고려할 사항이 있는 점, 금융투자업자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NCR 산정시 대출원리금 잔액의 50%를 감액하며, 은행·보험권에서도 우발채무의 경우 신용환산율 50%를 적용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체 PF 대출원금의 50%를 신용공여액으로 계산하여 사업장별 과징금을 각각 8억 1,900만 원, 32억 5,0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8시 24분 폐회)